사드보복 재발 없게… "한중, 국가 상대 투자자 소송 許하라"

정부, 한·중FTA서 ISDS 개선 요구

경쟁력 있는 분야 개방 확대 추진
기업 실질적 보호 강화 추진 목표

올해 1월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패널 토론자들이 종합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2의 '사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관광, 문화, 의료, 금융, 법률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국회 보고는 정부가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로 이후 정부는 올해 초 1차 협상을 목표로 중국과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후속협상의 목표를 우리기업의 서비스시장 진출 기반 강화와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 추진으로 정했다.

특히 투자자 보호 및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송금과 청산 절차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자의 활용 가능성을 감안한 ISDS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FTA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 투자 보호 관련 조항과 투자자·당사국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해결·보상 절차 등을 담고 있지만, 협정문은 최근 중국의 경제보복을 막는데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중국이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투자 보호 제도 개선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계획서에서 "중측은 주요 자본수출국으로 투자보호 원칙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나 특정 제도 개선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관광, 문화, 의료, 금융, 법률 등 우리 업계의 중국 진출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정 자유무역구(FTZ)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개방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중국이 국내적 필요성에 따라 개방을 확대 중인 금융, 물류 등 분야와 달리 문화·콘텐츠 분야 개방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국은 자국 산업육성 차원에서 관심 있는 금융, 회계 등 분야의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산업부는 국내적 민감성과 이익균형을 고려해 대응하면서 한국이 중국보다 전체적인 개방 수준이 높은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중FTA 후속협상으로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최대 0.0186% 성장, 대중 수출 최대 0.46% 증가, 대중 수입 0.31% 증가, 중국의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36.3% 증가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양국간 협의를 통해 향후 후속협상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후속협상 과정에서 주요 계기별로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울산에 있는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패가 성공보다 값진 경험 될 것"

文대통령, 울산 유니스트 졸업식서
지역사회 소중히 생각해줄 것 당부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은 결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다. 실패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실패는 오히려 우리를 더 성장시켜주는 힘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울산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 졸업식에 참석,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학생들에게 축하하면서 전한 말이다.

올해로 9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니스트는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THE(Times Higer Education)가 지난해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5위로 평가했다. THE는 또 논문 피인용수 부문에서 유니스트를 국내 1위로 꼽았다.

특히 울산과기대가 전신인 유니스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국립대를 울산지역에 처음 세웠고,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맡을 당시에 과학기술원으로 승격시키는 등 문 대통령과는 적잖은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출발에 나서는 (졸업생)여러분의 앞길이 순탄할 수만은 없다. 실패도 겪고 좌절도 겪을 것"이라면서 "때로는 실패가 성공보다 값진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도 살면서 실패가 많았다. 대통령 당선도 재수로 되지 않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졸업생들이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해 줄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의 자리도 자신의 노력에 많은 도움이 더해져 함께 이뤄냈다. 유니스트와 지역사회가 여러분을 키워줬다"며 청소하는 분들, 경비원, 조리사, 영양사, 시설관리자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를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역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의 동력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유니스트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울산의 인재를 미래과학자로 길러왔다"면서 "정부는 유니스트와 같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지역 인재양성과 산학협력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졸업식 참석에 앞서 학생 창업 시제품 등이 있는 전시관을 참관하고 창업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학생들의 건의내용을 귀담아 들은 문 대통령은 간담회 끝말에서 "민간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성이 있는 데이터는 일종의 공공재라고 생각하는게 필요할 것 같다. 기업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개방하더라도 너무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기보단 비용을 대폭 낮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동석한 부처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연대보증 역시 정책금융에선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니 정책금융에서 시작해 일반금융까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설 밥상 民心잡기… 여야 때이른 경쟁

추미애, 급식 배식 등 민생 챙기기
홍준표, 영남권서 지지층 다지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다일공동체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밥퍼 무료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2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부산 안전 및 생활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설 밥상' 여론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2일 서울에 위치한 '밥퍼 나눔운동본부'를 찾아 급식 배식에 참여하는 등 민생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추 대표는 13일에도 발달장애인 교육기관인 꿈더하기 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등 '나눔을 통한 민생 챙기기'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동시에 그는 국회 일정에 '보이콧' 중인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생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일선 검사들의 용기 있는 고백마저 '표적 수사를 위한 정치보복'이라고 몰아가고 있다"며 "한 번이라도 사회 정의를 위한 양심과 용기를 가져봤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각 상임위원회가 발에 땀 나게 뛰어도 모자라다"며 "민생을 볼모로 한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복귀할 것을 요청한다"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보수 텃밭'인 영남권을 돌며 지지층 다지기 행보를 시작했다.

홍 대표는 이날 부산시청에서 안전 및 생활점검 회의를 열고 민생 물가와 안전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김해 신공항 추진, 지리산댐을 통한 용수 확보 등 지역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홍 대표는 "부산이 살 길은 첨단기업 유치이고, 그러려면 물류 수송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부산이 살길은 물류 수송의 길을 여는 것이고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앞으로 우리 당이 총력을 모아 (김해 신공항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용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산과 경남이 충돌하는 문제인데, 경남지사 당시 부산에 물을 공급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고 지리산댐을 제안했다"며 "지리산 인근 주민도 80%가 찬성해 현실화 계획을 세웠는데 정부가 좌파 시민단체의 눈치보느라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의 물 문제는 지리산댐을 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 지리산댐을 만들면 경남과 부산의 식수 문제가 해결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국민 생활이 좀 나아져야 하는데 새 정부가 온 뒤 국민 생활이 더욱 팍팍해졌다"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세금고지서를 받아들면 문재인 정부에게 표를 줬던 사람도 (다시)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바른미래당 출범 D-Day… '정당성' 강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을 하루 앞둔 12일 타(他) 정당들을 비판하며 통합신당인 바른미래당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들 정당들은 이날 각각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 출발'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제 국민의당 시대를 마감하지만, 국민의당 창당 정신은 면면히 이어져 범개혁 정당으로 더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혁을 이루고, 나라를 지키고, 민생을 돌보는 대안 야당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바른미래당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무너진 공정의 가치부터 바로 세우겠다. 실력만으로 이길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바른미래당의 제1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은 호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호남정신을 더 크게 확산하고 광주정신이 지킨 민주주의를 한 발짝 더 진전시키는 것"이라며 "호남과 영남,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반목하던 과거가 아니라 동서화합과 통합, 개혁으로 국민을 정치 중심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으로 나뉘어 싸움질만 하는 것이 121석 여당과 117석 제1야당의 현주소"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도 했다.

또한 문재인정부에 대해서도 그는 "오만과 독선을 멈추지 않고 있다. 안보는 북한에 끌려다니며 한미공조의 균열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한미·한중관계 어느 것 하나 관리하지 못하면서 북핵·미사일에 속수무책으로 (대응해) 국민 불안만 키웠다"고 밝혔다.

/이창원 기자